정념 스님 “교구자치로 ‘화엄 종단’ 완성”

8월 6일 출마 선언 기자간담회
AI시대 파고 넘으려 출마 결심
‘단임’ 선언…‘교구자치법’ 제정
“종책 · 미래비전으로 후보 선택”
질의응답서 단일화 가능성 시사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전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8월 6일 출마 선언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마 계기와 정견을 발표했다.

글=신중일 기자 · 사진=김내영 기자

“권력은 교구와 대중에게 내려놓고, 재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수행과 교육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청정한 승가를 만들고, 사찰의 담장을 넘어 아파하는 국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자비의 불교로 회향하겠습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월정사 전 주지 정념 스님의 출마 서원 일성이다.

정념 스님은 8월 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출마 선언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마 계기와 정견을 전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오전 선운사 주지를 사임한 경우 스님을 비롯해 공감과 미래 공동대표 탄원·보인 스님과 소속 종회의원이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정념 스님은 AI 대전환 시대의 파고를 넘어서는 새로운 종책을 제안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고 출마의 변을 전하며 단임을 선언했다. 스님은 “수행자는 계산이 아니라 서원으로 나서는 사람”이라며 “그 서원의 증표로 ‘단임’을 서약한다. 연임을 구하지 않고 이번 임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야말로 사부대중께 올릴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다짐”이라고 약속했다.

총무원장 선거인단 확대 시사

정념 스님은 학연과 문중이 아닌 수행과 원력이 소임을 맡는 풍토를 만들고 총무원장 선거인단 확대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스님은 “직능직 중앙종회의원은 직능 대표성이 제대로 발현되도록 선출 제도를 함께 개혁하겠다”면서 “앞서 서약한 단임제를 종헌으로 명문화하고 사부대중의 민의가 반영되도록 선거인단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총무원장 선출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제안했다.

질의응답에서도 정념 스님은 단임제 추진에 대해 “한 번 더 연임한다고 해도 종단에 좋은 결실을 가져오기 어렵고, 종단이 경직되고 권력 중심의 문화로 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총무원장은 한 차례 소임에 원력을 다하고 좋은 후임자에게 종단 운영을 계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구자치 로드맵 제시

22년간의 교구본사 주지로서 오대산 일원을 혁신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교구자치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 역시 제시했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24개 교구본사로 이양하는 ‘분권형 종단’을 임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자치 행정의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게 정념 스님의 공약이다.

스님은 “‘교구자치법’을 제정해 말사 주지 임명권을 교구본사로 이관하고 주요 종령 제정에는 교구장협의회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며, 존립이 위태로운 미자립 사찰을 위한 지원기금을 마련해 지역의 작은 사찰들이 스러지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면서 “중앙과 교구와 개별 사찰이 자율성을 지키면서 서로를 받쳐주는 화엄의 인드라망과 같은 종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구의 입체적 예산 확보를 위해 △30% 포교기금 의무 조성 △교구 상생 공동발전기금 조성 △정부·지자체 연계 및 민관협력(PPP) △민간 포교기금·창작기금 등 4대 재정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AI시대 불교가 나아갈 길은…

종단의 AI 로봇 수계 및 가사 착의에 대해 “AI를 깊게 통찰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해 왔던 정념 스님은 자신의 종책 공약으로 ‘불교 AI 윤리 선언’을 내놨다. 스님은 “자비와 정견(正見)의 원칙에 기반한 ‘불교 AI 윤리 선언’으로 기술 문명이 나아갈 방향을 밝히겠다”면서 “AI시대의 정신적 위기 앞에서 불교가 치유의 중심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도 AI 로봇 스님 수계와 가사 착의에 대해서 “AI에게 수계하고 가사를 수하는 것보다 불교적 관점에서 AI 윤리 규범을 제정하는 일이 먼저다. 자비와 정견을 바탕으로 기술이 인간을 위해 복무하고 인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가 천명 프로젝트’를 통한 출가 장벽 완화와 승려 의료비 전액 지원 등 승가복지 확대 계획도 전했다. 정념 스님은 “행자 교육과 강원 과정을 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늦깎이·만학 출가의 문턱을 낮추어 출가의 흐름을 다시 잇겠다”면서 “승려 의료비 전액 지원과 교구별 노후 요양 거점을 마련하고,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종단이 먼저 건강과 주거를 살펴 지원하는 능동형 복지 체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공감 정책 있다면 단일화 가능”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정책과 대의가 같은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종단 안팎에서 보내오는 기대와 지지가 큰 만큼 후보직을 쉽게 내려놓을 수는 없다”며, 선거를 통해 종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이에 대해 정념 스님은 “단일화는 한편으로 거의 필수적인 조건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한다”면서도 “저는 이 시대와 종단을 바라보며 종단이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선거를 통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수행 대중과 주변의 많은 대중이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있어 제가 함부로 후보직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누구라도 좋은 정책을 갖고 대중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온다면 뜻을 같이하는 일은 항상 열려 있다”고 향후 종도들의 여론에 따라 단일화 논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장에 해답이 있다”

22년 6개월을 월정사 주지를 맡으며 축적한 교구행정 경험도 총무원장 후보로서의 주요 강점으로 내세웠다. 정념 스님은 “세상의 답은 현장에 있다”며 “교구본사는 교구 대중의 수행과 복지, 교육, 전법을 책임지는 중심 역할을 해왔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현장을 바라보고 고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종단의 현실을 잘 알고 실질적인 해법을 풀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와 함께 선거 과정에서 반복되는 비방과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밝혀져야 할 의혹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밝혀져야 한다”면서도 “과도한 네거티브가 선거의 선택 기준이 되는 것은 건전한 종책 선거와 종단 화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념 스님은 “종책과 미래 비전을 중심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평온한 선거가 돼야 한다”며 “제가 바라본 종단과 사회, 역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1일간의 종책 경쟁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기획
④ 선거운동 어떻게 하나

24개 본사서 ‘표심’ 잡기

종법이 정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21일간이다. 이 기간 후보들은 본격적인 종책 경쟁에 돌입한다.

선거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은 △종책자료집 제작 및 배부 △신문광고 △종책토론회 참석 등이다. 후보자는 종책과 공약, 경력 등을 담은 32면 이내의 인쇄물 1종을 제작할 수 있으며, 배부 수량은 선거권자의 2배 이내다. 신문광고 역시 불교계 신문으로 한정되고 총 6회까지만 가능하다.

공식 선거운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정은 전국 24개 교구본사 순회다. 후보들은 교구별 간담회를 통해 종도들과 만나 교구 현안을 청취하고 종단 운영 방향과 공약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한다. 선거인단 321명의 상당수가 교구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교구 방문은 표심을 가늠하는 핵심 일정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종단 원로의원을 비롯한 원로 스님을 예방하고, 전국 주요 선원 등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일정도 이어간다. 이들은 선거권을 갖고 있진 않지만 종단의 상징성과 영향력이 큰 만큼 후보들은 종단의 미래 비전과 운영 구상을 설명하며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을 쏟는다.

종책토론회, 이번엔 열릴까

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이 참여하는 종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역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토론회가 열린 사례는 많지 않다.

첫 공식 후보자 토론회는 2003년 제31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열렸다. 한국불교기자협회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후보였던 종하 스님과 법장 스님은 종단 운영 비전과 주요 종책을 발표했다.

이후 2005년 제32대 선거에서는 한국불교기자협회와 청정선거실현승가운동본부 등 4개 단체가 종책토론회를 추진했지만 후보자의 참여 거부로 무산됐다. 2013년 제34대 선거와 2017년 제35대 선거에서는 일부 후보가 종책토론회를 제안했으나 실제 개최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주최한 종책토론회는 2018년 제36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마련됐다. 후보자 4명이 5분간 종책을 발표하고 사전 질문지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제38대 선거 역시 다자 구도가 예상되는 만큼 후보 간 종책과 비전을 비교할 수 있는 종책토론회가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선거중립 · 공명선거’ 과제

총무원장 선거에서 매번 쟁점이 되는 부분은 종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다.

종단 ‘선거법’은 종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교구본사의 교역직·일반직 종무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는 물론 선거캠프 참여와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말사 주지가 교역직 종무원일 경우 종무직을 사직해야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 후보자는 선거일 기준 1년 이내 금전과 물품, 여비, 향응 등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해 금권선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종무직을 맡고 있는 후보자의 공식 업무와 선거운동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돼 왔다.

여기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새로운 홍보 수단이 등장하면서 현행 선거법이 모두 규율하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2005년 제32대 총무원장 선거 당시 ‘청정선거실현승가운동본부’가 구성됐으나, 임의 기구라는 한계로 일부 문제 제기에 그쳐 활동에 아쉬움을 남겼다.

2012년 선거법 개정 이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013년과 2017년 총무원장 선거에서 공명선거위원단이 운영되며 선거 감시 활동을 펼쳤다.

이번 제38대 선거에서도 공명선거위원단이 운영된다. 교구별 1인 이상을 포함해 30인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단은 선거 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증거 수집과 조사 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후보 간 종책 경쟁과 함께 선거중립과 공명선거 원칙이 얼마나 충실히 지켜질 것인지가 이번 선거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특별취재팀

